

[카드뉴스] 가상경제와 가상자산, 어디까지 왔을까?

>koscom NEWSROOM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 공포와 함께 금리인상 국면을 맞고 있다. 세계 각국은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의 칼을 빼들었지만,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만큼 가상자산은 주요한 가치를 지닐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제대로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불법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룰이 지난 3월 시행됐으며 가톨릭대 수학과 전인태 교수는 동아일보 기고에서 “트래블룰을 위해 개발된 솔루션이 거래별로 통일되지 않아 앞으로 해외까지 확대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끼리 그물망처럼 연결돼야 하므로 중복 투자에 따른 비용도 많고 확장 가능성도 낮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은

바야흐로 가상경제 2.0 시대

가상경제 2.0이란 기존의 디지털 환경에서 하지 못했던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이 기술적 발전을 통해 구현 가능한 확장된 형태의 경제활동을 의미.

가상경제 2.0의 인프라 기능을 하는 NFT 거래소 등 경제 주체들의 소비 및 투자 가능한 요소들이 확대될 것이고, 이는 경제성장과 발전 동력으로 작용할 거란 전망이다.

가상경제의 발전 단계



출처 :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Emerging Tech&Biz_vol.3>,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국내 가상자산 규모 55조원, 하루 평균 11조원 거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당정 간담회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총 55조2천억원,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억원으로 집계.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조사 대상	결과값	비고
시가총액	55.2조원	'21.12.31. 기준
일평균 거래규모	11.3조원	'21.07.01. ~ '21.12.31.
총영업이익	3.4조원	'21.01.01. ~ '21.09.30.
원화예치금	7.6조원	'21.12.31. 기준
가상자산수	1,257개	중복 제거시 623종
단독상장 가상자산수	403종	'21.12.31. 기준
가격변동성(MDD)	65%	'21.07.01 ~ '21.12.31.
등록 이용자	1,525만명	'21.12.31. 기준
실제 이용자	558만명	'21.12.31. 기준
가장 많은 이용 연령대	30대	실제 이용자의 31%
가상자산 보유규모	1백만원 이하	실제 이용자의 56%
1일 평균 거래횟수	4회	'21.4분기 / 원화마켓
1회 평균 거래금액	75만원	'21.4분기 / 원화마켓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22.6.13. 발표

금융혁신으로 국가경제 체질 개선!

지난 6월 16일, 윤 정부는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을 내걸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 국가경제 체질 개선 위한 공공·연금, 노동시장, 교육, 금융, 서비스산업 부문의 정부 방침 제시. **투기, 규제, 가상자산 등 금융혁신 부문에 대한 정부 방침에 이목 집중.**

국가경제 체질 개선 위한 금융혁신 부문 정부 방침

디지털 혁신금융 및 혁신성장 지원 확대

- '(가칭, 신설)금융규제개혁 TF'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기후변화 등 대응 금융안정·혁신과제 발굴·추진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책임있는 성장 환경 조성
- 정책금융의 민간 중복 최소화 등 역할 재정립
-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3/4) 등 추진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선진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재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
 -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규제혁파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0.23→0.20%)
 - * 종목당 100억원 이상 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
- 국내 외환시장에 해외소재 은행·증권사 등의 참여 허용 및 개장시장 연장
 - * 런던장 마감 고려, 1단계 새벽 2시→항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출처 : 기획재정부

가상자산시장은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규제 가능

미국, EU 등 세계 주요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강화하는 중.
 2020년 유럽집행위원회(EC)는 가상자산시장을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규제하는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안 발의, 2022년 EU 전체 27개 회원국에 적용 예정.

MiCA규제안의 자본시장규제 유사성

거래목적물

금융투자상품이
아닌 가상자산

발행인규제

- 발행인의 법인 자격
- 백서발간의무
- 신의성실의무

공시의무

- 백서의 주요 내용 및 형식 규제
- 내부정보, 중요거래 정보의 공시
- 제재 내용의 공시



불공정거래규제

-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
- 내부자 거래 금지

업자규제

- 다양한 가상자산업자에 대한
진입규제 및 행위규제
- 이행상충 관리의무
- 고객자산 보호의무
- 자기자본, 보험가입 등을 포함한
건전성요건

자료: '가상자산시장 규제의 자본시장규제 유사성',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유형 따라 다른 규제 방향 필요

영국 금융감독당국 FCA을 포함해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을
교환토큰, 유틸리티토큰, 증권토큰의 세 가지로 분류.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각각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방향성 필요 제기.

가상자산 유형에 따른 규제의 정도



"순수" 유틸리티토큰

- 네트워크상의 재화 또는 용역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가상자산
- 증권토큰인지 유틸리티 토큰인지가 법적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음 (리플 XRP 사건)



교환토큰

- 유통·교환을 목적으로 발행된 가상자산
-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
- 새롭게 규제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증권토큰

- 증권으로서, 특정 투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는 가상자산
- 자금세탁방지 등의 규제
- 기존 증권법 체계의 강한 규제를 받음

출처 :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5년 가상자산 조세 체계 안착 가능?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상품이나 무형자산이나 분류하기에 따라 과세체계 달라질 전망.
6월 16일 고광호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에서 2년 추가 유예하며
2025년이 되어서야 가상자산 관련 세법 및 조세 체계 안착할 것으로 판단.

증권형 토큰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주요 규제



공시규제

증권토큰을 발행하고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사모발행, 클라우드펀딩 등의 규정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면제·완화 받아야 함. 또한 정기공시 등 유통공시 의무 부담.



불공정거래규제

증권토큰의 거래에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을 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증권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처벌됨.



금융투자업자규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증권토큰에 대한 중개, 자문, 집합투자 등의 행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려는 경우, 증권법상 중개업자, 자문업자 등으로 승인을 받아야 함

출처: '미국과 EU의 가상자산거래자 보호제도의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가상자산 사업자와 전통 금융기관의 경쟁

가상자산 시장의 확대와 가상자산 규제 체계 마련 가능성이 높아지며
전통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시장 선점을 위한 행보가 빨라짐.



1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투자 적극적 확대



2 금융기관과 IT기업 간 기술협력 통해 디지털 자산 수탁 플랫폼 구축



3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업 진출

국내 금융회사와 테크기업 간 협력 사례



출처: '가상자산 사업화 위한 금융회사와 테크기업의 경쟁과 협력 가속화', 자본시장연구원

해외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현황

금리인상, 이자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해외 금융사들은 수익원 다각화 고심.
최근 대형 금융기관들도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

사업유형	주요 금융사	주요 내용
수탁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및 피델리티디지털자산 서비스(FDAS) 설립
		디지털자산을 예탁증서 형태로 거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출시
	  등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 예정
자산관리	 	자사 PB 서비스 이용하는 고객 자산가 대상 가상자산 펀드 투자 중개
투자상품	  등	고객 자산가 대상 비트코인 패시브 펀드
		DeFi 및 블록체인 투자 ETF 신청, 최초로 비상장 가상자산 옵션거래 개시
		비트코인 투자 가능한 퇴직연금 운용, 유럽에서 비트코인 ETP 출시
대출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현금 대출 제공
가상자산 기술개발		자체 스테이블코인 JPM 개발,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진출
플랫폼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에 투자

출처 : 자본시장연구원, 주요 언론

국내 금융사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 현황

국내 금융권 역시 수익원 다각화 위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는 중.

주요 금융사	주요 내용
 KB 증권	KB은행이 지분 투자한 법인·기관 투자자 대상 비트코인 커스터디 업체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추가 지분 투자
 SK 증권	코인거래소 지닥을 운영하는 피어테크와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협약(2021.5)
 한화투자증권	두나무(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보유) 지분 투자
 신한금융투자	디지털자산 담당 부서 통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준비
 KSD 한국에타결제인	디지털금융 혁신 기반 마련. 가상자산 입법 지원 및 증권형 토큰(STO) 플랫폼 구축 중장기 로드맵 발표 계획(2022년 중)
 KB 자산운용	디지털자산운용 준비위원회 출범(2022.2). 가상자산 현·선물 ETF 구성 재간접 펀드 등 선제 출시 계획
 KB 금융지주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에 약 100억원 규모의 투자 감행
 MIRAE ASSET	그룹 산하에 디지털자산 전문회사 신규설립 예정. 경력직 인력 모집(블록체인 지갑 개발/운영, 커스터디 서비스 기획/운영, 디지털자산 초기 투자 발굴 등)(2022.3기준)
 KB 국민은행	블록체인 관련 기업 해시드·해치랩스와 한국디지털에셋(KODA) 설립
 신한은행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
 우리은행	코인플러그와 디커스터디 합작
 KEB 하나은행	한국은행 CBDC 발행 대비 시범 시스템 구축
 NH농협은행	커스터디 전문 기업 카르도에 전략적 지분투자

출처: 각사

- * 저작권법에 의하여 해당 콘텐츠는 코스콤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해당 콘텐츠는 사전 동의없이 2차 가공 및 영리적인 이용을 금합니다.